

용산·서초·수서·분당 등 공공기관 부지·건물 매물 나온다

불필요 자산 매각 정부 지침에
코레일, 용산 등 8조 규모 보고
LH, 분당사옥 2025년 매물 계획
마사회, 용산사옥·서초부지 매각



서울 용산역 코레일 정비창 부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들이 서울 용산과 서초·수서, 경기 분당 등지에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매물로 내놓는다. 불필요한 보유 자산을 매각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른 조치인데 부동산 경기침체에 혈값에 처리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국회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정부와 주요 공기업들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방안을 놓고 최종적으로 논의 중이다.

코레일은 용산·서울역복부·광운대·수색 역세권 등 총 7조9976억원 상당(예정가)의 부동산 매각 방안을 정부에

보고했다. 특히 용산역세권 부지는 매각 예정가가 6조3146억원에 달한다. 철도공사는

2023~2024년에 매각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역복부(5326억원)와 광운대 역세권(4978억원)을 올해 하반기 중에, 수색역세권(9724억원)을 2026년 하반기 중에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경기지역 본부 사옥을 2025년 하반기에 매물로 내놓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 사옥은 면적이 7만2000㎡로 매각 예정가가 4600억원에 달한다.

한국마사회도 서울 용산구 소재 사옥(1만8213㎡)을 2025년 하반기에 매각하기로 했다. 마사회는 현재 고층부만 사용 중인 해당 건물의 매각가가 9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사회는 서울 서초 지역의 토지(1400㎡)도 2024년 하반기에 매각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원래 서초 장외발매소를 개

설하려다 2011년에 사업 자체가 취소되면서 유휴 부지로 남아 있었다. 마사회는 해당 부지의 가격이 13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5년 하반기에 서울 수서 인근 열원 부지(6600㎡)를 매각한다. 인근 지역의 시가 표준 대비 평균매매율을 적용해 500억 원 상당의 매각가가 예상된다.

IBK기업은행은 지점 자산 6곳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지점은 서울 장위동·쌍문역·수유동, 경기 수지·성남IT 지점, 대구 수성프렘프월드 지점 등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자산 효율화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대학생-기업 협업 프로젝트 성과 공유

산업부, 오늘부터 '산업혁신인재위크' 혁신인재 양성사업 성과 확산 취지

전국 대학(원)생들이 기업과 협업한 산학 프로젝트 성과를 겨루는 행사가 나흘간 펼쳐진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년 산업혁신인재 위크' 행사가 8일~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올해 2회째인 이번 행사는 제11회 공학 페스티벌(학사)과 제3회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석·박사)를 통합해 개최하는 것으로, 혁신인재(학사, 석·박사) 양성사업의 우수사례 성과를 확산하는 취지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면 행사로 전면 전환, 방문객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혁신관, 컨소시엄관, 캡스톤 디자인관, 공학 체험관 등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산업부는 일 평균 30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담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공학 페스티벌에서는 전국 73개 공학 교육혁신센터의 현장형 교육을 통해 학



지난해 열린 제1회 산업혁신인재 위크 통합 시상식이 열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부생이 제작한 시제품 경진대회와 청년 공학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공과 대학생 대상 OX 퀴즈쇼는 무대와 참가 장소를 이원 생중계해 관객과 참가자가 함께 즐길 수 있게 구성했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가전, 미래형 이동수단, 차세대반도체, 지능형로봇 산업계 종사자들의 강연을 들으며 현장 기술에 대한 경험을 배우는 컨소시엄 아카데미도 진행된다.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에서는 산업부의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사업 지원을 받는 석·박사 학생이 산업현장에서 나

타는 기술적 문제를 기업과 함께 연구한 성과를 공유하고 경연한다.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제품 제작과 특허 출원, 애로기술 해결 등 다양한 형태의 성과를 경연하며, 선발된 우수 프로젝트는 사례집으로 제작해 전국 80개 대학에 배포된다.

행사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캡스톤 디자인 및 산학 프로젝트 우수사례를 선정해 국무총리상과 산업부장관상 등 참여학생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는 산업혁신인재 시상식이 개최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가맹법 등 위반 사업자 '자진시정'시 공정위, 과징금 최대 50% 깎아준다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거래 관련 법을 어겨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스스로 잘못 된 점을 시정할 경우 깎아주는 과징금 비율이 50%로 확대된다. 자진 시정 유인을 높여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초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일~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범위만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최대 30%인 자진 시정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확대한다.

위반 사업자에 자진시정 유도 중·소상공인 피해구제 '초점'

내년부터 불공정 하도급 관련 정액과징금 상한 20억으로 상향

지금까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고 다시 생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 해주면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에 초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다만 자진 시정조치의 수준에 따라 과징금 감경비율은 차등을 두기로 했다.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경우 30~50%까지 감경해주고,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엔 10~30%까지 과징금을 깎을 수 있다. '적극적 노력은 인정되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는 0~10%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또 내년부터 불공정 하도급행위와 관련해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이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기술탈취나 보복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는 정액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매우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오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된다.

대리점법과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의 과징금 고시에 차이가 없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했다.

위반횟수 및 가중치 산정 시에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은 포함되고, 고발 후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 등의 경우는 제외됨이 명시된다.

아울러 조사 시 협조 정도(10%), 심의 시 협조 정도(10%)에 따라 각각 감경비율을 산정한 후 그 둘을 합산해 최대 20%까지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당해'라는 용어를 알기 쉬운 '해당'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하고,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상호 불일치하던 것을 일치시키는 등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조문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인천공항, 코로나 이후 일일여객 9만명 돌파

지난 2020년 2월 이후 986일 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6일 인천공항 일일 여객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9만명을 넘어선 9만325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인천공항 하루 여객이 9만명을 넘은 것은 코로나 이전인 2020년 2월 24일 이후 986일 만이다. 올해 1월 1일 실적(9093명) 대비로는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공사는 이를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10월 기준 전체 여객수요의

24.6%를 차지했던 일본, 대만의 코로나 봉쇄 완화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 당국은 지난 10월 11일 코로나 19로 중단된 외국인 무비자 입국을 재개한 바 있다. 코로나 직후 강력한 방역을 유지해온 대만 역시 9월 16일부터 무비자 관광을 재개하고 지난 10월 13일에는 입국 후 격리를 완전 해제 조치를 취했다.

국내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무사증 입국 재개 방침에 따라 2020년 3월에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됐던 91개 국가 지역 모두 이달 1일부터 무사

증 입국 제도를 재적용 받게 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인천공항의 여객 회복률은 2019년 동월 대비 39.2%까지 올라간 상태이다. 특히 중국 노선을 제외하면 48.5%를 기록해 코로나 이전 대비 거의 절반수준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국내외의 우호적 환경 조성으로 여객 회복세가 가팔라지고 있어 항공사, 상업시설 등 공항생태계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수요 증대를 위한 인천공항 차원의 노력은 물론, 인천공항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요시설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